

과테말라의 내전 종식 이후: 평화협정 이행의 험로

박구병*

단독/아주대학교

Park, Koo-Byoung (2018), "Peace Agreements in Post-Conflict Guatemala: A Steep Path to Implementing a Positive Peace"

ABSTRACT

Guatemala, in Central America, was a prominent example of a counterinsurgency state that culminated in a terrible genocide carried out against indigenous villages by the military dictatorship in the early 1980s. Although the signing of peace accords in December 1996 marked a dramatic transition from war to peace in the region, it turned out to be only a step toward a negative peace, in other words, toward the absence of armed violence. Guatemala seemed to have a long way to go toward a positive peace such as that required for a fairer society, one that is free from want, and poised for the achievement of an appropriate public order and development.

It should be noted tha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Guatemala represented by the Civil Society Assembly (ASC) played a crucial role in defining the priorities of the peace process and mediating between the Guatemalan government and the guerrilla groups. After the signing of the peace accords, the Guatemalan Truth Commission (CEH) tried to clarify the root causes of the prolonged civil war and how they had functioned, in order to present recommendations for building a firm and lasting peace. The recommendations included the reduction of poverty, reduction of socioeconomic inequality, eliminating discrimination against the indigenous population, and eradicating impunity.

Furthermore, there are decisive structural changes needed for establishing a lasting peace in Guatemala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l strategy for public safety based on the progressive demilitarization of the society, the strengthening of processes and institutions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he equitable redistribution of land and resources, and the building of a multiethnic and intercultural society through adequate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the indigenous. It is also worthy of note that actors and institutions at the local and

* Koo-Byoung Park is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History at Ajou University, Korea (kbpark@ajou.ac.kr).

grassroots levels are indispensable in implementing peace agreements and carrying out integral human development.

Key Words: Guatemala, civil war, peace agreements, civil society assembly, positive peace

과테말라는 이제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 하는 평화 유지와 강화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목표에 다가서기 위해 과테말라는 평화협정을 통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토대를 놓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의제를 마련했다. 이 협정의 준수는 역사적이고 회피할 수 없는 책무이다. 현재와 미래의 세대들은 평화의 약속이 내포하는 모든 의미와 영향을 인식해야 한다. 과테말라 공화국 정부와 과테말라혁명연합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United Nations, Peacemaker 1996).

1990년대 중남아메리카: 내전에서 평화로

흔히 ‘제2의 냉전’ 시대로 지칭되는 1980년대 내내 코스타리카를 제외한 중남아메리카 곳곳에서는 무력 충돌과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¹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는 파괴적인 내전이 남긴 고통에 시달리며 정치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생생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특히 중남아메리카에서 원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과테말라는 1980년대 초 군부정권의 본격적인 반란 진압작전(counterinsurgency)이 펼쳐지기 훨씬 전부터 외세 개입과 군부독재, 그리고 군부와 저항세력 사이의 장기 내전을 겪었다. 과테말라에서 이런 만성적인 폭력과 강도는 1979년 이후 뚜렷이 변화했는데, 이때 군부는 ‘빈민의 게릴라 부대’(EGP)와 ‘무장민중조직’(ORPA) 같은 게릴라 세력을 농촌의 잠재적인 지지기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전면적인 소탕작전을 벌이면서 사실상 비무장 원주민 전체를 표적으로 삼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1979년 7월 니카라과에서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FSLN)이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데 성공한 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증대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1999년 2월 발표된 ‘역사적진실규명위원회’(Comisión para el Esclarecimiento

1 이 시기에 초강대국 사이에는 ‘긴 평화로 간주되기까지 하는 부전(不戰) 상태가 뚜렷한 반면, 제3세계 또는 저발전 지역(global South)에서는 탈식민화 과정, 종족 간의 마찰, 불분명한 경계선 탓에 불거진 충돌 등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열전(熱戰)이 펼쳐졌다 (Halliday 1983; Gaddis 1989; Kwon 2013b, 228).

Histórico, CEH)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60년부터 1996년까지 과테말라에서는 약 5만 명의 실종자를 포함해 20만 명 이상이 살해당했고, 전쟁고아가 약 25만 명에 이르렀으며, 약 15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었다. 3만 7천여 건에 이르는 살인과 실종 사건 가운데 64퍼센트가 페르난도 로메오 루카스 가르시아(Fernando Romeo Lucas García) 장군과 호세 에프라인 리오스 몬트(José Efraín Ríos Montt) 장군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1981년 6월부터 1982년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또 위법 행위의 93퍼센트가 군부(준[準]군사 단체인 ‘암살단’ 포함)의 책임으로 간주되었다.

1986-1997년에 유엔 사무차장을 역임하고 과테말라 평화 협상 과정에 조정자로 참여한 영국의 머락 굴딩(Marrack Goulding)에 따르면, 1990년대 과테말라의 평화협정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 나미비아의 평화합의, 캄보디아에 관한 파리 협정,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 이후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에서 이루어진 평화적 이행과 같은 위상을 지닌 성과로서 주목받을 만하다(Jonas 2000a, xiii). 하지만 그 이행 과정과 평화 정착에 이르는 길은 순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평화협정의 서명으로 장기 내전을 종식시킬 뿐 아니라 과테말라의 정치 조직과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갈등 유발 원인들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생긴 반면, 1999년 5월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 대한 유권자의 대거 불참(20퍼센트에 불과한 투표율)과 거부를 비롯해 곳곳에 도사린 협정 이행의 난관 탓에 평화 실현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론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내전 종식과 평화협정 이후 20여 년의 흐름을 염두에 두고 이 글에서는 먼저 과테말라 내전의 발발, 특히 1980년대 초 원주민 학살의 배경과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전쟁이라는 ‘난폭한 스승’으로부터 얻은 교훈을 현실화하기 위해 1980년대에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주도한 콘타도라(Contadora) 제안과 에스키피라스(Esquipulas) 평화안 등의 국제적인 공조가 무엇을 지향했는지 정리할 것이다. 다음으로 1996년 12월 평화협정의 체결 이후 유엔을 비롯한 외부 활동가들과 과테말라인들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리고 평화협정 이행 과정에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했는지 검토하면서 평화협정의 역사적 성과와 협정 이행의 지체 사이의 간극에 대해 주목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내전 종식 이후 평화 구축 과정이 보여주는 특성, 과테말라에서 평화 개념의 구성 범위와 내용, 과테말라의 사례가 평화 정착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에 제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추출해보고자 한다.

장기 내전의 전개와 1980년대 초의 제노사이드

과테말라는 이웃한 엘살바도르와 더불어 1980년대에 고조된 반란 진압작전 훨씬 이전부터 군부가 지배하는 ‘반란 진압작전 국가’였다.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군부의 정치 개입, 제한적인 시민적·정치적 자유 등의 불운한 역사적 유산 가운데 36년간 지속된 내전은 라틴아메리카를 반공 동맹의 틀 속에 묶어두려는 미국의 냉전 전략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다. 1950년에 집권한 중도좌파 성향의 하코보 아르벤스 구스만(Jacobo Arbenz Guzmán) 대통령이 농업개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미국계 기업 유나이티드 프루트(United Fruit Company)와 갈등을 빚게 되었을 때, 이 기업은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함께 1954년 군부의 쿠데타를 후원하면서 과테말라 정국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1930년대부터 표방해온 ‘선린정책’의 폐기를 공식화하는 것이었다. 쿠데타로 집권한 과테말라 군부가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반대파를 탄압하자 이에 반발한 마르코 안토니오 이온 소사(Marco Antonio Yon Sosa), 세사르 몬테스(César Montes), 루이스 투르시오스 리마(Luis Turcios Lima) 등 일부 소장 장교들이 미겔 이디고라스 푸에리테스(Miguel Ydígoras Fuentes) 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을 이끌게 되었다. 특히 쿠바 혁명의 성공에 고무된 이들이 1960년에 과테말라 최초의 게릴라 단체인 ‘무장반란군’(Fuerzas Armadas Rebeldes)을 결성하고 산악지대에 거점을 마련하면서 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66년 미국의 린든 B. 존슨 행정부는 그린베레를 파견하고 과테말라 군의 훈련비용을 지원했으며 도시 테러리스트 진압 부대를 창설하려는 과테말라 정부를 도왔다(Doyle and Osorio 1996). 이 시기에 ‘암살단’(death squad)으로 알려진 준(準)군사 단체가 생겨났고, 1974년까지 사망자 수는 42,000명에 이르렀다. 농촌 지역에서 패배에 직면한 게릴라 세력의 일부가 도시로 퇴각하면서 1968년 8월 말 과테말라 주재 미국 대사 존 고든 메인(John Gordon Mein)이 ‘무장반란군’에 의해 암살당하기도 했다. 1970년 7월, 부정 선거의 의혹 속에 카를로스 아라나 오소리오(Carlos Arana Osorio) 장군이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저항세력과 비무장 민간인들의 살해나 실종이 급증했다. 오소리오는 “만일 평정을 위해 과테말라 전체를 묘지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기까지 했다. 1970년대 초부터 악화된 인권침해, 학살, 부정선거 등을 문제 삼으면서 1977년 미국의 카터 행정부가 과테말라에 대한

무기 판매를 금지했지만, 1983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1985년에는 과테말라 군부 정권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원조를 공식 재개했다.

1970년대 말까지 미국 정부의 후원을 받은 과테말라 군과 경찰, 그리고 ‘암살단’ 이 야당, 노조,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에게 선별적인 공세를 가했지만, 1978년 5월 말 알타베라파스 주 판소스(Panzós) 학살²을 계기로 이 작전은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Dictaan-Bang-oa and Medrana 2004, 112). 대다수 연구자들에 따르면, 판소스 학살에 대한 관심과 저항이 사실상 부재했기 때문에 과테말라 군부는 더욱 대담한 방식으로 반란 진압작전을 펼쳤고, 1980년대 초 원주민 촌락을 초토화하면서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피난민들을 살해하는 작전을 시행하기까지 했다. 반면 무장반란군, 무장민중조직, 그리고 1972년 엘 키체 주의 익스칸에서 창설된 ‘빈민의 게릴라 부대’ 등 대표적인 게릴라 단체들은 1970년대 말부터 과테말라시뿐 아니라 엘 키체, 남부 해안과 북부 내륙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경찰서 습격, 태업과 파업 유도, 도로 봉쇄, 군 장교나 대지주들의 납치 등으로 대응했다.

미국의 강화된 지원에 힘입어 로메오 루카스 가르시아 장군과 그 측근들은 게릴라 세력을 농촌의 잠재적인 지지기반으로부터 떼어내기 위해 전면적인 소탕작전을 펼치면서 비무장 원주민까지 표적으로 삼아 납치, 고문, 살해, 성폭행, 마을 파괴 등을 자행했다. 군부는 대내외적으로 공산주의 세력, 특히 쿠바 정부와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정부의 간섭에 맞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주민들을 게릴라의 지지세력, 즉 ‘내부의 적’으로 간주한 것이었다. 이에 맞서기 위해 1982년 2월, 네 개의 주요 게릴라 단체들이 과테말라혁명연합(Unidad Revolucionaria Nacional Guatemalteca, URNG)으로 결집했지만 군부의 강경한 진압 작전으로 크게 약화되었다.

‘역사적진실규명위원회’의 공식 보고서 『과테말라, 침묵의 기억』(*Guatemala, Memoria del Silencio*)에는 무차별적이고 참혹했던 1981-1983년 당시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과테말라 군부가 산악지대의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전개한 대대적인 학살과 강제이주, 특히 1982년 2월부터 9월까지 루카스 가르시아 장군과 리오스 몬트 장군이 주도한 원주민 촌락에 대한 초토화

2 수백 명의 퀘치(Q'eqchi') 부족 농민들이 인근 농장주들에게 불법적으로 빼앗긴 공동체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기 위해 판소스의 관청 앞에 집결했으나 군의 발포로 선두에 서 있던 60세 여성 마마 마킨(Mamá Maquín)을 비롯해 최소한 2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작전인 ‘승리 작전 계획 82’(Plan de Campaña Victoria 82)를 ‘제노사이드’(genocidio)로 규정했다(UNOPS 1999, 51-52, 91).³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적인 압력과 요청: 콘타도라 제안과 에스키플라스 평화안

1983년 1월 8-9일, 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의 외교부 장관들은 파나마의 콘타도라 섬에 모여 중앙아메리카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위기, 즉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의 군사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뒤 콘타도라 해법을 제안했다. 이 콘타도라 그룹은 스웨덴의 올로프 팔메 총리와 1982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1982년 노벨평화상의 공동 수상자 알폰소 가르시아 로블레스(Alfonso García Robles)와 알바 미르달(Alva Myrdal) 등이 4개국 대통령에게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맡아줄 것을 요청한 뒤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라틴아메리카의 문제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였다.

이 그룹의 활동 계획은 중앙아메리카의 갈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고 미국 정부의 군사 정책 기조의 유연화를 가져왔다. 이들의 제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 그리고 여러 국제기구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1983년 9월 콘타도라 그룹의 중재에 따라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외교부 장관들은 파나마시에 모여 공동의 목표를 담은 문서를 채택했다. 각국의 장관들은 지역 내에서 민주화의 증진, 무력 충돌의 종식, 국제법 준수, 경제 발전과 상호 협력의 회복을 지향하는 데 합의했다.

3 1946년 유엔 총회의 제노사이드 결의안을 바탕으로 폴란드 출신의 법학자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의 주도로 1948년 12월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후 반세기 이상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개념의 정의를 둘러싸고 적잖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어떤 이들은 협약의 법률적 유효성을 인정하고 제노사이드의 범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지만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협약의 규정이 인류가 저지른 다양한 형태의 대량학살을 포괄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데 동의하면서 최소한 협약에서 배제된 사회 집단과 정치 집단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산발적이거나 계획되지 않은 일련의 학살과 달리 제노사이드는 정부나 그에 준하는 권력 집단이 인종, 민족, 종족, 종교, 성별, 건강, 지역의 차이나 정치적·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의 대립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절멸하려는 의도에서 조직적으로 파괴하는 반인륜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Choi 2005, 25-38).

1984년 9월에 발표된 중앙아메리카의 평화와 상호 협력에 대한 콘타도라 결의안은 평화와 민주화로의 이행, 지역의 안보와 경제 협력에 대한 자세한 책무와 약속을 포함했고 지역 위원회로 하여금 책무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 1985년 7월에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선출된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우루과이의 대통령들이 리마에서 콘타도라 지지 그룹을 결성했다. 하지만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잠정적으로 수용된 콘타도라 행동 계획은 니카라과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 때문에 미국의 지지라는 결정적 요소를 확보하지 못했다. 미국은 자국 이해관계의 보호를 명분으로 일방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콘타도라 행동 계획에 결코 협조적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제사법재판소와 유엔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호소를 막고자 했다.

1985년 5월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정부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 봉쇄 조치의 단행을 선언하고 같은 해 9월에 콘타도라 그룹이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 수정안을 채택했으나 니카라과가 거부하면서 목표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Bagley 1986, 13-14). ‘민주화’라는 표현을 콘타도라 결의안에 포함시키려는 미국의 시도는 향후 지역 내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대변하게 될 터였다(Short 2007, 66). 결국 미국과 니카라과 간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1986년 5월 이전에 합의의 도출이 어렵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1986년 6월에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가 수정안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콘타도라 그룹의 제안은 지역 내 모든 국가들이 합의하는 평화안을 확립하는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향후 토론을 위한 조건과 한계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갈등의 원인을 지역 차원의 용어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인시켰다(Short 2007, 69). 또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민주주의의 성취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향후에 평화안이 출현하는 데 필요한 주춧돌을 놓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Naciones Unidas 1986, 2).

결국 취임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오스카르 아리아스(Oscar Arias Sánchez)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주도로 1986년 5월 24-25일 과테말라의 에스키펠라스(Esquipulas)에서 제1차 에스키펠라스 평화안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콘타도라 제안을 기반으로 삼아 중앙아메리카 정치의 근본적인 재편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에스키펠라스 선언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5개국 정상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공표했다. 5개국 정상은 무엇보다 중앙아메리카의 평화가 다원적이고 참여적인 진정한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진정한 민주적 과정은 사회 정의의 옹호, 인권 존중, 각국의 주권과 영토 존중, 어떠한 외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각국이 독자적인 경제적·정치적·사회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존중 등을 수반할 터였다(Naciones Unidas 1986, 3). 나아가 이 선언은 선거 과정을 통해 일종의 중앙아메리카 의회의 설립을 모색하고자 위원회의 설치를 요구했다.

1986년 말에 공개된 이른바 이란-콘트라 게이트 추문으로 레이건 행정부의 중앙아메리카 정책이 신뢰를 잃은 가운데 아리아스를 비롯한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의 대통령들이 또 다른 평화안 모색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7년 8월 7일에는 제2차 에스키폴라스 평화안이 마련되었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속에서 미국이 다소 고립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중앙아메리카의 지도자들은 평화와 발전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난민, 귀환자, 추방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 없이 역내의 지속적인 평화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확언했다(Pearce 1998, 609-610). 제2차 에스키폴라스 평화안은 원칙적으로 콘타도라 제안과 같은 구상에 토대를 두었으나 그 내용은 한층 더 명확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 지속된 내전의 동시 휴전, 반란 세력에 대한 외부 지원의 중단, 모든 게릴라 대원의 사면, 비상조치의 철폐, 정치범 석방과 언론 자유의 확립, 내부 민주주의의 확립, 국민적 화해 시도 등이었다(Frängsmyr and Abrams 1997, 189; Short 2007, 69). 최종적인 평화협정의 체결은 니카라과에서는 1990년, 엘살바도르에서는 1992년, 과테말라에서는 1996년에 이루어지지만 제2차 에스키폴라스 평화안은 각국에서 내전 종식을 위한 정치적 해법의 기반을 다진 셈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마련된 에스키폴라스 평화안은 오스카르 아리아스의 평화안이라 부를 만했다. 그리하여 1987년 노벨평화상 수상의 영예는 아리아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에게 돌아갔다.

과테말라 평화협정의 주요 쟁점

양자 협상의 개시와 협상 과정의 난항

과테말라의 군부 정권이 표면적으로 퇴진한 해는 1986년이였다. 앞서 1985년에는 인권 감독 기구인 인권 옴부즈맨과 헌법재판소의 설립을 규정한 새로운

헌법이 승인되었다. 이에 따라 20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었으나 비니시오 세레소(Vinicio Cerezo) 정부는 부패와 비효율성을 드러낼 뿐이었고 실제로는 군부가 강력한 실권을 유지했다. 수년간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1990년 3월부터 과테말라 정부와 과테말라혁명연합은 노르웨이에서 평화협상 과정을 개시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게릴라 조직으로서는 거의 와해된 과테말라혁명연합은 사실 엘살바도르의 파라분도마르티해방전선보다 훨씬 더 취약한 처지에서 협상에 나섰다. 반면 군부는 전쟁의 승리자로 자처하고 있었고 외부 세력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았다. 게다가 엘살바도르나 아르헨티나의 군부와 달리 과테말라 군부는 국내 민간부문의 신뢰를 잃지 않고 있었다. 1990년대 초에도 정치 엘리트들은 사실상 군부에 종속된 상태였다.

1991년 4월에 선출된 과테말라의 호르헤 세라노(Jorge Serrano) 대통령은 국내외 압력에 대응하면서 자신의 전국화해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Reconciliación)⁴ 활동 경험을 토대로 과테말라혁명연합과 직접적인 대화를 개시했다. 혁명연합과의 협상은 선거전에 뛰어난 보수적 성향의 후보자들과 달리 보이려는 세라노의 차별화 전략이었다. 예비회담에서 과테말라혁명연합이 먼저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는 선결조건을 제외하고 실질적이고 중요한 의제를 받아들인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작지만 매우 중대한 진전이었다. 곧이어 민주화에 대한 원칙적 합의(1991년)와 인권에 대한 부분적인 예비 합의(1992년)가 이루어졌다(Jonas 2000a, 40).

하지만 1992년 8월,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협상 과정이 지체되었고 세라노 정부 막바지에는 완전히 결렬되기에 이르렀다. 1993년 5월 세라노의 친위쿠데타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 탓에 평화협상 과정이 중단되었는데, 세라노 정부는 실질적인 쟁점들의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는 휴전의 최종기한을 강요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보인 듯했다. 이는 과테말라혁명연합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였다. 1993년 초 세라노는 유엔에서 자신을 평화협상 과정의 위대한 설계자로 과시하면서도 조기 휴전의 대가(代價)로 인권 상황의 개선과 검증, 비군사화(무장해제) 등 두 가지 쟁점에만 합의할 것을 제안했다. 과테말라혁명연합은 더 많은 의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전략을 고수했고 협상 과정에 민간 부문의 참여와 그 대표성을 요구했다. 정부 협상단은 이들의 태도를 전술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4 이는 1987년 8월에 아리아스가 주도한 제2차 에스키폴라스 계획에 따라 1988년에 수립된 기구였다(Short 2007, 72).

양측은 이 시기에 유엔이 검증하고 확인할 수는 있어도 평화를 조정하지 못하리라고, 즉 엘살바도르와 같은 해결책이 과테말라에 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어쨌든 양자 협상은 필수적인 단계였다. 군부와 민간기업가연합(CACIF)은 과테말라혁명연합과의 어떤 협상에도 강력히 반대했다. 유엔과 국제사회로서는 과테말라 내부의 강력한 저항을 이겨낼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다. 과테말라 출신의 조정자 몬시뇰(Monsignor) 로돌포 케사다 토루뇨(Rodolfo Quezada Toruño)는 이 무렵 “과테말라혁명연합의 다섯 번째 사령관”이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세라노 정부는 바르셀로나 출신의 외교관이자 유엔의 최초 참관인이었던 프란세스크 벤드렐(Francesc Vendrell)을 과테말라혁명연합에 친화적인 인물로 인식하고 유엔에 교체를 요구했고, 유엔은 프랑스의 외교관 장 아르노(Jean Arnault)를 대체자로 내세웠다.

유엔의 조정자 역할

1991-1993년에 유엔은 양자 협상 과정의 참관인 역할에 그쳤으나 1994-1995년에는 협상의 조정자로 나서기 시작했고, 1994년 11월부터 과테말라 내에서 유엔인권감시단(MINUGUA)의 활동이 펼쳐졌다. 국제사회가 과테말라 내전의 종식 여부에 좀 더 주목하는 가운데 1994년 1월에는 의제 설정을 위한 기본 협정(Acuerdo Marco)을 통해 ‘우호국’의 역할이 공식화되었고,⁵ 1994년 3월에는 인권에 관한 포괄적인 합의안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전체 평화협정 과정의 돌파구였다. 기본 협정의 체결은 국내의 조정자로부터 국제적 차원의 조정자를 두는 협상으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동시에 시민사회회의(Asamblea de la Sociedad Civil, ASC)의 출범과 그 역할을 공인하는 것이었다.⁶ 이 회의체는 농민과 원주민 조직뿐 아니라 가톨릭 관련 기구와 주요 노동조합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부문의 연합일 터였다(Jonas 2000a, 167, 232). 또 기본 협정은 종족적·문화적으로 다양한 과테말라와 국제사회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⁷ 인권에 관한 포괄적인

5 여기에는 멕시코,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 그리고 명목상으로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도 참여했다. 멕시코는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대변인격이었고 노르웨이는 ‘정직한 중개인’으로서 어려운 순간에도 협상의 비공식 외교에 깊이 관여했으며, 스페인은 유럽공동체의 대표였다(Jonas 2000a, 63).

6 몬시뇰 케사다 토루뇨는 1994년 5월 17일 시민사회회의가 공식 출범할 때부터 1995년 1월까지 대표직을 수행했다(Krznic 1999, 5-6).

7 이는 과테말라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한 협정으로서 흔히 덜 중요하게 인식되지만 엘살바도르에서는 부재했던 요소였다(Jonas 2000a, 57).

합의는 교전 양측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전반적인 인권 상황을 추적하고 관찰하기 위한 유엔 검증기구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두 가지 합의가 1994년 6월 오슬로에서 추가적으로 체결되었는데, 하나는 6월 17일에 조인된 ‘무력 충돌로 거주지에서 쫓겨난 주민들의 재정착에 관한 합의’였고 다른 하나는 6월 23일에 확정된 ‘과거 인권침해와 폭력 행위를 규명할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위원회는 ‘역사적진실규명위원회’라는 공식 명칭을 지니게 될 터였다.

본격적인 평화유지 사절단이라기보다 인권 현황의 확인과 검증 임무를 띤 기구라고 할 수 있었던 유엔인권감시단이 1994년 11월 과테말라에 도착할 무렵 과테말라 정부와 군 장교들은 감시단의 임무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며 어떤 경우에도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사하는 권한을 부여받아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유엔인권감시단은 국제사회가 과테말라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현장에 기반을 둔 기구였다. 유엔인권감시단은 네 차례(1995년 3월, 6월, 10월, 1996년 3월)의 보고서를 통해 인권상황 개선의 주요 걸림돌이 과테말라 정부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요인, 즉 내전의 지속이 아니라 면책(처벌면제, *impunidad*) 관행임을 강조했다. 유엔인권감시단은 그 자체로 최악의 인권 상황을 교정할 순 없었지만 과테말라의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400명 이상의 감시단원들의 존재는 인권 상황의 개선을 이끌어내고 더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Jonas 2000a, 48). 유엔인권감시단의 또 다른 공헌은 검증과 확인 업무를 전국적인 인권 보호 기구의 수립과 위상 강화와 연결시킨 대목이었다. 그럼에도 과테말라 정부는 유엔인권감시단의 활동을 은밀히 방해하고 ‘국가 주권’을 명분으로 내세워 유엔인권감시단의 활동을 제한하고자 시도하곤 했다.

과테말라 내의 화해 분위기 조성 and 평화협정 체결

과테말라에서는 1995년 11월, 총선 전후의 분위기가 평화협정 과정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과테말라혁명연합은 전례 없이 과테말라인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몇 개월 뒤 40년 만에 처음으로 좌파 성향의 대중·원주민 조직 연합이 총선에 참여하고자 ‘새로운과테말라민주전선’(FDNG)이라는 정당을 창설했다. 공식적으로 정계에 진출한 이 정당은 명목상으로는 과테말라혁명연합과 별개의 조직이지만 사실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졌고, 그 출범은 과테말라혁명연합이 무장 투쟁에서 정치적 투쟁으로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추가적인 조짐으로 읽혔다.

1995년 말 결선 투표에서 공공연히 평화 협상 과정에 반대한 리오스 몬트의 극우 정당 ‘과테말라공화전선’(FRG) 후보와 맞붙어 2퍼센트 내의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국민진보당(PAN) 출신의 알바로 아르수 이리고엔(Álvaro Arzú Irigoyen)은 의회 내에서 그의 정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고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1996년 1월 임기를 시작했다. 평화협정 체결을 최우선 정책으로 표방한 기업가 출신의 아르수는 중도좌파 성향의 ‘평화 내각’을 선보였다. 여기에는 과테말라혁명연합의 투사 출신으로 새로운 ‘과테말라 정부의 평화위원회’(COPAZ)를 이끈 구스타보 포라스(Gustavo Porras), 평화협정 체결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외무장관 에두아르도 스테인(Eduardo Stein), 국방장관 훌리오 발코니(Julio Balconi)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새로운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과테말라혁명연합을 ‘패배한 세력’, “파괴적이고 전복적인 불온한 테러리스트” 등으로 치부하는 식의 직접적이고 이념적인 공세를 중단했다. 이전과 달리 아르수의 정부는 과테말라혁명연합을 협상의 상대로 받아들였고 심지어 그들의 “애국적 동기”를 존중했다. 이는 협상의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1996년 3월 무력 공세의 전면적 중지를 요구하는 과테말라혁명연합의 전례 없는 ‘선의’의 표현에 대해 정부는 공격적인 게릴라 진압 작전의 중단으로 화답했다. 이는 내전 전체의 종식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무력 충돌의 종결을 의미했다(Jonas 2000a, 51). 1996년 5월 6일 멕시코시에서 과테말라 정부의 평화위원회와 과테말라혁명연합 간에 ‘사회경제적 양상과 농업 현황에 대한 합의’⁸가 조인된 뒤 남은 난제는 탈(脫)군사화, 즉 무장 해제로, 이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핵심 쟁점이었다. 1996년 9월 19일 멕시코에서 확정된 ‘민간인 권한의 강화와 민주 사회에서 군의 역할에 관한 합의’는 예전에 막강한 권한을 누렸던 군의 역할을 외부의 위협에 맞서 영토와 국경을 온전히 방어하는 것으로 그 기능을 제한하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 합의는 헌법 개정을 전제로 해야 하는 난제였는데, 민간자위순찰대(Patrulla de Autodefensa Civil, PAC)와 다른 게릴라 진압 보안부대의 폐지, 군 규모와 예산을 1/3 수준으로 축소, 국민의 안전을 보충할 새로운 민간경찰의 창설, 그리고 만연해 있는 면책(처벌면제)

8 이 사회경제적 합의에 대해서는 과테말라 민간기업가연합조차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Short 2007, 82).

관행의 폐지와 사법제도의 획기적인 개혁 등을 포함했다. 이는 한마디로 냉전시대에 비대해진 게릴라 진압작전 기구의 해체를 의미했고, 과테말라혁명연합의 정치 조직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과테말라 사회의 탈군사화를 모색하려는 방안이었다.

과테말라의 평화협정은 주요 의제에 관한 합의 장소에서 드러나듯 그야말로 다면적인 국제 협력의 결과물이었다. 최종적인 휴전 합의는 1996년 12월 4일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헌법 개정과 선거 제도에 관한 합의는 12월 7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과테말라혁명연합의 합법화와 법적인 통합에 관한 합의는 12월 12일 마드리드에서, 마지막으로 구체적 실행 시간표(cronograma)의 이행, 준수, 검증에 관한 합의는 12월 29일 과테말라시에서 체결되었다(United Nations, Peacemaker 1996). 1996년 12월 29일에 과테말라시 국립궁전에서 최종 체결된 평화협정의 정식 명칭은 ‘확고하고 지속적인 평화에 관한 합의안’(el Acuerdo de paz firme y duradera)이었다(United Nations, Peacemaker 1996; Prensa Libre 1996). 합의안에 따르면, 평화협정은 ‘국민적 합의’를 반영하고, 과테말라 공화국은 인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의 보증과 수호라는 목표와 원칙에 충실할 것을 재확인할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 무력 충돌에 의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이들에게 영토 내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정부는 그들의 귀환과 더불어 존엄하고 안전한 조건 속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었다. 게다가 합의안은 원주민들의 정체성과 권리에 대한 인정이 다종족적, 다문화적, 다언어적 국가의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 그리고 모든 사회 부문에서 남성과 여성 시민들의 참여 보장이 사회 정의와 경제 성장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점을 적시했다(Reilly 2009, 128).

이는 평화가 정의의 구현에서 비롯되고 정의를 통해 유지된다는 신념, 즉 평화의 개념과 정의의 개념이 오랫동안 굳게 결합되어 있음을 입증하는(Janssen 2010, 32, 93) 동시에 평화학자 요한 갈통이나 전쟁사가 마이클 하워드가 강조한 대로 폭력의 중단이나 부재를 뜻하는 ‘소극적 평화’에서 공정하고 정당하며 빈곤의 염려가 없는 사회의 건설, 일반적으로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질서의 성취를 의미하는 ‘적극적 평화’로의 이행을 추진하려는 시도였다(Galtung 1996; Pearce 1998, 589; Howard 2002, 13-14). 갈등을 규정하는 원주민들의 독특한 방식에 따르면, 갈등이란 개인과 공동체 간 관계의 불균형과 불일치를 의미했다. 다시 조화를 이루려면 어떤 형태로든 경쟁이 있어서는 안 되며 대신 균형을

회복하고 재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리하여 평화협정 과정에서 마야 원주민 운동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들은 줄곧 평화가 무력 충돌의 부재를 넘어 그것을 초래한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구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Dictaan-Bang-oa and Medrana 2004, 117).

평화 정착의 조건과 평화협정 이행의 지체

내전 이후 평화 정착의 선결조건: 과거사정리

장기 내전을 겪은 과테말라와 다른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서 평화는 무엇보다 폭력 행위가 중지된 상태를 의미했다. 하지만 과테말라에서 무력 충돌은 인종차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정치적 배제의 역사 속에서 출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과거사에 대한 정리와 반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평화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1996년 1월에 알바로 아르수(Álvaro Enrique Arzú)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요약한 대로 과테말라의 갈등 유발 요인은 면책(처벌면제) 관행뿐 아니라 차별과 빈곤이었다. 또 3년에 걸친 ‘역사적 기억의 회복 프로젝트’(REMHI)의 조사 결과에 의거해 1998년에 발간된 과테말라대주교구 인권국(Oficina de Derechos Humanos del Arzobispado de Guatemala)의 보고서 『과테말라, 눈카 마스!』(*Guatemala, Nunca Más!*)⁹에 따르면, 생존자들은 갈등의 근본 원인들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약속을 완수하겠다는 진정된 의지가 없다면 폭력이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사회적 요구 사항을 일상생활의 탈군사회, 토지 소유와 생활 조건, 일상생활 재건의 자유로 요약했다.

‘역사적진실규명위원회’의 보고서 『과테말라, 침묵의 기억』 역시 상호 연관된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국가폭력의 세 가지 원인으로 경제적 배제, 인종차별, 정치적 권위주의 등을 꼽았다. 아울러 원주민 종족 사이의 해묵은 갈등을 활용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과 군부의 명령 체계에 종속된 민간자위순찰대의 활동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점, 그리고 제노사이드를 자행한 과테말라 군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데 냉전 시대의 ‘국가안보론’(doctrine of National Security)과

9 가톨릭교회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 유엔의 후원으로 설립된 ‘역사적진실규명위원회’의 보고서 『과테말라, 침묵의 기억』과 달리 일부 가해자들의 실명을 적시했다(Seligson 2005, 209).

미국 정부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점 등을 적시했다.

『과테말라, 침묵의 기억』의 권고사항에는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이 있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정부에 공식적인 책임의 인정을 요구하고 앞서 언급했듯이 1980년대 초 군부가 자행한 대량학살과 강제 이주를 제노사이드로 명시한 점이었다. ‘역사적진실규명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1996년 12월에 제정된 ‘국민화해법’¹⁰의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히면서 국제적으로 금지된 위법행위를 저지른 모든 이들이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둘째, 위원회는 평화협정의 일환으로 체결된 ‘민간인 권한의 강화와 민주사회에서 군의 역할에 관한 합의’에 따라 군의 대대적인 재정비를 건의했다. 과테말라에서 지속적이고 의미 있는 민주화의 이행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효과적인 탈군사회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Sieder 2001, 163). 이를 위해 군 정보기관의 개혁, 위법행위에 연루된 장교들의 퇴임 유도를 위한 경력 조사, 군 예산 삭감과 군 병력 감축, 민간자위순찰대의 해체,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화의 문화에 관한 교육, 국립민간경찰(Policia Nacional Civil, PNC)의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셋째, 위원회는 원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장려하고 인종차별과 원주민 경시정책의 폐기를 권고했다. 내전기 폭력의 희생자 가운데 무려 83퍼센트가 마야 원주민(나머지 17퍼센트는 라디노[ladino, 혼혈인])이었다는 사실은 냉전 시대의 정치적 이념이 얼마나 인종차별적인 면모를 지녔는지, 그리고 냉전 시대의 정치사와 끔찍한 대량학살의 역사를 왜 분리할 수 없는지 입증했다(Kwon 2013a, 57). 『과테말라, 침묵의 기억』은 과테말라의 대량학살이 인종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군부의 억압적인 반공 정치가 ‘비(非)시민’의 지위로 강등시킨(Kwon 2013a, 188) 대다수 원주민들이 예전의 주변적 지위에서 벗어나 어떻게 훼손된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것과 더불어 개인적·집단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를 위해 원주민의 문화적 상징과 관습법을 존중하고 이를 과테말라의 법률 체계에 통합하는 등의 조치들이 제안되었다.

넷째, 위원회는 미국 정부와 중앙정보국이 과테말라의 억압적 체제를 지원하는데 관여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충돌이 기본적으로 과테말

10 의회에서 승인된 이 법은 내전 기간 동안 벌어진 행위 일체를 사면하려는 취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미국의 소설가 프란시스코 골드먼은 뉴욕타임스의 기고문을 통해 이 법을 “군부 지도자들에게 사실상 전면적인 면책을 보증하려는 것”으로, 아울러 이 합의를 “평화 조약이 아니라 투항”으로 묘사했다(Goldman 1996).

라인 사이에 발생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고수했지만, 1999년 3월 과테말라를 방문한 빌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의 위법행위 개입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으로써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¹¹

평화협정 체결 이후 과테말라의 과거사정리 과정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가톨릭교회의 적극적인 진상 규명 활동이었다. 엘살바도르나 온두라스와 대조적으로 과테말라의 가톨릭교회는 대중 차원의 기억의 정치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무력 충돌 기간에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최초의 광범위한 조사는 ‘역사적진실규명위원회’에 앞서 과테말라대주교구인권국(ODHAG)이 주도했다. 1990년에 창설된 이 기구는 1995년 조사 활동에 착수해 1998년 4월 24일에 보고서 『과테말라, 눈카 마스!』를 발간했다. 이는 ‘역사적 기억의 회복 프로젝트’(REMHI)의 결과물로서 3년 동안 전국의 교구에서 수집된 증언 6천여 건을 근거로 삼았다. 그 보고서는 5만5천여 명의 희생자들과 2만5천 건 이상의 살인 사건을 기록했는데, 그 중 약 80퍼센트는 과테말라 군이 자행한 것이었고 9퍼센트 정도가 과테말라혁명연합의 책임으로 간주되었다.¹² 『과테말라, 눈카 마스!』에 따르면, 총력 파괴의 65퍼센트(415건)와 3만7천여 건에 이르는 대다수 살인과 실종 사건은 1981년 6월부터 1982년 12월까지 18개월(루카스 가르시아의 집권 말기 9개월과 리오스 몬트의 집권 초기 9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했다(REMHI, ODHAG 1999, 290-291, 307). 원래 ‘역사적진실규명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역사적 기억의 회복 프로젝트’는 위법행위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적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증언자들의 안전에 대한 염려 때문에 가해자 실명의 거론은 몇 가지 사례에 그쳤다.

11 클린턴의 방문 이후 미국의 비정부기구 국가안보기록보관소(NSA)는 미국 정부가 반란 진압작전에 한층 더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전의 비밀문서들을 공개하면서 1982년부터 1985년 사이에 실종된 182명에 관한 과테말라 군의 비밀 사건 파일을 함께 제시했다(Sieder 2001, 179).

12 『과테말라, 침묵의 기억』에 따르면, 93퍼센트가 군부와 ‘암살단’의 위법 행위인 반면, 3퍼센트는 좌익 게릴라의 책임으로 간주(나머지 4퍼센트는 특정 정파와 경제 엘리트 분파 등의 책임으로 추정)되었다(Isaacs 2010, 16).

시민사회의 역할과 ‘원주민들의 정체성과 권리에 관한 협정’

『과테말라, 침묵의 기억』은 마야 원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인종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겪어왔고, 사실상의 내부 식민지에 대한 이런 배제의 역사가 장기 내전의 핵심 요인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그러므로 학살의 주요 피해자인 원주민들을 실질적인 과테말라 국민으로 통합해야 하는 과제의 실현이 시급할 수밖에 없었다. 1994년에 창설된 과테말라마야원주민조직(COPMAGUA)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은 외국 학자들과 국제 전문 기구들의 협조를 받아 학살 현장과 집단 공동묘지를 발굴하고 학살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기념비의 건립을 주도했다(Garrard 2017, 142-143). 이런 활동은 생존자들이 종족과 언어의 벽을 넘어 새로운 지역 간 공동체를 형성하는 작업에 도움을 주었다. 여러 원주민 공동체에서 망자를 추모하는 지역 차원의 의례가 중요시되었고 동시에 마야의 문화적 상징과 관습법(慣習法)에 대한 사회적 승인이 이루어지며 1995년 3월 31일에 체결된 ‘원주민들의 정체성과 권리에 관한 협정’에서 드러나듯 원칙적으로는 오랫동안 법률적·실질적인 차별, 착취, 불의에 시달려온 원주민들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 즉 정치와 사회활동이 장려되었다(Naciones Unidas 1995, 5, 12-13). 하지만 원주민 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협정은 원주민들이 지닌 전망의 완벽한 구현이 아니라 원주민들의 관심사를 더 발전시키는 발판으로 인식될 뿐이었다(Dictaan-Bang-oa and Medrana 2004, 116).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인 1992년 12월의 노벨평화상 수상 연설에서 리고베르타 멘추 톱이 밝혔듯이 과테말라인들은 1944년 10월부터 라틴아메리카에서 예외적으로 민주주의적 개혁의 시대를 경험했지만 10년 뒤부터 외세의 개입에 따른 치열한 내전에 휩싸이게 되었다. 냉전 대립이 고스란히 과테말라에 투영되어 무력 충돌과 정치적·사회경제적 종속을 심화시켰고, 군부독재 체제의 폭력은 원주민들에게 집중적인 피해를 입혔다. 멘추는 노벨평화상 수여를 과테말라에서 인권 회복, 사회적 평등, 정의를 위해 싸우다 숨진 모든 이들에 대한 예우로 받아들이면서 당시 지속되고 있던 원주민에 대한 억압, 특히 원주민 청년들을 민간자위순찰대로 강제 동원하고 다른 부족 원주민들을 탄압하는 데 이용하는 악의적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 바 있었다(Abrams 1999, 44-46).

한편 살해 위협 속에서도 과테말라의 법의학자와 인류학자들은 산악과 농촌 지역에서 내전기에 살해된 수백 구의 사체들을 발굴해냈다. 내전의 와중에 실종된 아이들에게 가족을 찾아주는 일도 본격화했다. 종족적 구분이 뚜렷한

과테말라 사회에서 이런 아래로부터의 기억의 재건 작업에 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한 것은 과테말라의 진실 규명 과정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었다(Sieder 2003, 217). 특히 시민사회는 평화협정 과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Preti 2002, 116). 또 국제 감시단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마야 원주민들은 내전기에 심각하게 훼손된 문화적 정체성을 회복할 뿐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을 유지할 권리를 요구하게 되었다(Jonas 2000b, 24-25).

면책(처벌면제) 관행의 철폐와 법치의 회복

광범위한 평화협정은 과거사정리뿐 아니라 탈군사화, 토지개혁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협정, 원주민들의 정체성과 권리에 관한 협정 등을 통해 과테말라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처방을 제시했다. 이런 처방은 불신과 두려움, 분열과 단절감, 양극화 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게 될 터였다. 하지만 아르수 정부는 군 개혁과 인권침해 혐의자들의 인적 청산을 요구한 ‘역사적진실규명위원회’의 권고를 적극 수용하지 않았다. ‘역사적진실규명위원회’는 또한 새로운 훈련 원칙과 군 정보기관의 개혁, 장교들의 경력을 조사하고 위법행위에 연루된 이들을 해임시킬 수 있는 공식 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경제 엘리트들의 태도 역시 크게 변하지 않았고, 1998년 4월 헤라르디 주교 암살과 같이 국제적인 주목을 끌었던 사례에서조차 위법행위에 대한 면책이 지속되는 듯했다.

사법부 개혁을 위한 여러 조치들이 평화협정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법적·제도적 개혁은 전반적으로 미진했다. 사법부는 협박과 부패, 정치화, 적절한 교육 이수 인재의 부족, 농촌 지역의 준비 부족 같은 만성적인 문제에 시달렸고, 높은 범죄율과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 부족은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정부의 범죄 해결 역량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일부 과테말라인들이 사적(私的) 제재에 나서기도 하면서 과테말라의 평화 수립과 정착을 위한 사법 제도의 공정성 확보가 시급했다(Godoy 2002; Steenkamp 2011). 또한 평화협정에 따라 군 규모와 예산의 감축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강력한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는 군부의 권력 축소는 그리 쉽지 않았다. 1997년 1월 긴급하게 설립된 국립민간경찰(PNC)은 신규채용 인력을 적절히 심사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그것이 악습과 부패, 금품 강요에 깊이 연루된 이들의 표면적인 재조직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샀다. 게다가 무력 충돌의 종식 이후 범죄가 늘자 경찰 업무에 균을 다시 투입하는

상황이 펼쳐진 탓에 군부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다만 1995년 촌락의 치안을 관할하는 군 통제관의 폐지와 1997년 민간자위순찰대의 소집 해제 조치는 탈군사회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었다. 이들은 예전에 농촌 사회에 대한 군의 통제를 보장하는 핵심 기구였기 때문이다.

1998년 4월 26일 과테말라대주교구인권국의 후안 헤라르디(Juan Gerardi Conedera) 주교가 산세바스티안 사제관의 주차장에서 구타당하고 피살된 사건이 발생했다. 코스타리카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대주교구인권국의 창립을 주도한 그가 책임자로서 『과테말라, 눈카 마스!』를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뒤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총 4권, 1400쪽에 이르는 그 보고서는 헤라르디 주교가 강조했듯이 가톨릭교회의 사목(司牧) 활동이자 사회 선교의 일환으로서, 진실 규명이 고통스럽지만 의심할 바 없이 건전하고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행위이며, “동생을 죽인 카인에게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가 땅으로부터 내게 울부짖고 있다고 한 야훼의 말씀에 따라 피해자들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역설했다.

빗발치는 재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져 형식적인 조사에 그친 채 미궁에 빠질 뻔한 헤라르디 주교 피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와 재판이 개시되었고, 결국 2001년 6월 8일에 리마 에스트라다 대령, 비론 리마 대위, 올돌리오 비야누에바 선임 상사 등 전직 장교와 부서관 3명이 모두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과테말라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고위 장교들에게 내려진 최초의 유죄 판결이었다. 하지만 이런 성과를 거두기 위해 희생을 치러야 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헤라르디 사건의 특별검사 두 명, 즉 셀빈 갈린도(Celvin Galindo)와 레오폴도 세이식(Leopoldo Zeissig)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적잖은 증인들이 살해 협박 탓에 망명을 떠났고, 남아 있던 3명의 증인들은 살해당했다. 미결 재판이 재개된 날 밤에는 판사의 집에 수류탄이 투척되었고, 원고 측 변호인들과 검사까지 살해 협박을 받기도 했다(Goldman 2007, 388-389).

난항을 겪었음에도 일부 사건들에 대한 법적인 절차는 지속되었다. 2004년 코스타리카에서 열린 미주인권재판소는 1990년 9월 ‘암살단’에 의해 살해된 과테말라의 인류학자 미르나 맥(Myrna Mack) 사건 소송에서 과테말라 정부의 유죄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선고했다. 헤라르디 피살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 역시 2005년 3월과 2006년 1월 각각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다. 2006년 5월부터 진행된 피고인의 최종적인 변호, 즉 헌법 소원

(amparo)은 2007년 4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되었다(Goldman 2007, 390). 이 과정에서 과테말라의 난민, 해외 이주민 단체들은 국제적인 인권 단체들과 협력해 과테말라 정부가 헤라르디 주교 피살 사건의 경위를 밝히지 않거나 잘못 처리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하곤 했다(Jonas 2000a, 226).

시민사회 단체들은 줄곧 과거 위법 행위에 대한 공식 조사를 요청하고 일부는 ‘면책반대연합’을 구성해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과테말라, 눈카 마스!』가 출판되기 훨씬 전부터 진실 규명과 사법적 정의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Krznic 1999; Noh 2012).¹³ 예컨대 1995년 리고베르타 멘추 재단의 사례처럼 여러 경우에 시민사회 단체들은 흔히 정부의 과업으로 여겨지는 법적 보호와 범죄 조사의 업무를 보조했다. 『과테말라, 눈카 마스!』가 출판된 뒤 인권단체들은 루카스 가르시아와 리오스 몬트를 포함한 고위 군 장교들을 집단학살 혐의로 기소할 것을 청원하기도 했다. 결국 2010년대에 접어들어 리오스 몬트 장군의 제노사이드 혐의에 대한 사법적 심판 절차가 뒤늦게 이루어졌다.

나가며: 평화 정착을 위한 구조적 변화의 과제

20세기 후반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 마찬가지로 과테말라는 정치적 대립, 폭력 행위, 치안의 불안,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유산 등의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21세기 초에도 효과적인 통치와 평화 구축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평화 구축이 구조적인 불평등과 폭력의 담론에 도전함으로써 폭력적인 갈등의 뿌리에 대해 고민하고 사회 변화를 촉진하려는 장기적인 과정이라면, 그것은 레드리크가 정리하듯이 사회적 관계의 재설정에 주목하고 구조적인 폭력을 줄이기 위해서 상호의존적인 개인적·상관적(相關的)·구조적·문화적 관점 등 다양한 수준의 변화를 수반해야 할 것이다(Lederach 1997, 82-83; Mouly 2008, 306).

예컨대 엘살바도르의 평화 협상 과정에서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의 주요 목표는 군부의 권력을 축소하면서 스스로 공식적인 정치 영역에 자리 잡는 것이었다.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의 지도부는 진실 규명과 정의의 관철을 위한 요구가 평화 정착의 전체 과정을 어렵게 만들지 모른다고 판단해서

13 국제적인 민간단체들이 이런 노력을 효과적으로 후원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과테말라 출신 난민들도 시민사회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바 있다(Jonas 2000a, 225, 232).

사면법을 통해 면책을 승인했고, 정치적 고려 탓에 과거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벌은 우선시되지 않았다. 파라분도마르티민족해방전선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성이 부족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저항은 단명했다. 그동안 엘살바도르 정부는 사법적 정의를 추진하거나 희생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게릴라 세력이 평화협정을 통해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고 군부 권력의 축소를 추구한 엘살바도르에서 진실 규명과 사법적 심판 문제는 사실상 정치 엘리트들의 타협에 의해 결정되었고 평화협정 체결 이후 정치적 의제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1996년 12월 과테말라의 평화협정에서 언급된 평화는 최소한의 규정, 말하자면 “무력 충돌의 부재 상태”를 의미했다. 동시에 과테말라의 평화협정은 엘살바도르의 평화안과 비교해볼 때, 1996년 5월 초에 체결한 사회경제적 쟁점, 즉 ‘토지 분배와 농업 현황에 대한 합의에서 드러나듯 경제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달리 말해 그것은 내전 종식이라는 당면한 목표를 훨씬 넘어서는 요소들을 포함했다. 관련 조항은 에켄데 정부가 2000년까지 8-9퍼센트의 기존 세율을 12퍼센트로 올려 세입을 늘릴 것과, 농촌 발전을 위한 연간 공적 투자 프로그램이나 7-12세의 모든 아동에게 최소한 3년간의 초등교육을 제공할 것 등 오랫동안 유지해온 자유방임적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복지에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때문에 과테말라 평화협정의 포괄성과 광범위함이 오히려 민주화 과정의 진전과 협정의 이행, 평화의 실현에 얼마간 족쇄로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했다(Seligson 2005, 210).

이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숙고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협정의 내용 중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조항이 부족했으며, 내전 종식 이후 신자유주의적 추세가 강화되면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시행이 부진해지고 농촌에서 초국적인 농산업 기업이 차지하는 부분이 늘어났다는 진단과 평화협정 이후 민주적인 국정 운영뿐 아니라 시장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려는 ‘신자유주의적 평화’가 득세했다는 평가(Lipschutz 1998, 14)가 내려졌다. 또 군 정보기관의 영향력이 결코 줄어들지 않았고 2012년 민간인 시위대에 대한 학살에서 보듯이 강압의 위협이 다시 감지되는 등 1996년 12월 평화협정을 여전히 변화의 기준과 근거로 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증폭되었다(Granovsky-Larsen 2017, 55-57).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는 과테말라, 나아가 중앙아메리카 평화협정의 타결을

엘리트층의 승리인 동시에 대중·혁명 운동 세력의 패배로 인식하기도 한다(Jonas 2000a, 222).¹⁴

사실 과테말라 평화협정의 포괄성은 그것이 군부와 민간 엘리트, 게릴라 세력의 협상이라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의 산물이며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물임을 일러준다. 또한 과테말라와 같이 종족, 종교, 부와 교육 수준, 경제적 기회 등 여러 차원에서 적지 않은 분열과 단층선이 존재하는 곳에서 지속적인 평화의 정착은 구조적인 갈등의 요인과 성격, 기능에 대한 철저하고 엄격한 분석, 그에 입각한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 그리고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를 통한 효과적인 해법 모색과 평화의 문화 확산¹⁵ 등에 달려있을 것이다. 국제사회가 민주화, 자유시장, 법치 등 보편적인 비결과 방안에 의거해 재건의 모델을 제시하고 정치적 참여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할 수 있을지라도 궁극적인 해결책은 해당 사회 내부의 합의를 통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테말라 군이 애당초 과거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려는 과테말라혁명연합의 시도를 막았을 때 가톨릭교회와 지역 인권단체들이 담당할 역할은 일반적으로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평화 협상의 과정에 시민사회 단체를 공식적으로 포함시킨 과테말라의 사례는 다른 경우와 비교해 특기할 만하다. 1994년 초 이래 유엔의 조사 활동과 협상의 조정자 역할에 힘입어 시민사회회의에 참여한 과테말라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 측 협상단과 과테말라혁명연합에게 평화의 조건을 정식화하기 위해 다양한 쟁점을 토론하도록 제안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진실 규명 작업은 평화협정 체결과 ‘역사적진실규명위원회’의 합의로부터 도출된 정치적 성과였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게릴라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다양한 시민사회 운동이 효과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14 이와 관련해 1994년 중앙아메리카 난민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유럽연합 대표로 활동한 알도 텔라리키아의 결론, 즉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특히 ‘국가 현대화’의 과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인 책무를 감당할 수 없었다는 점, 결국 지역 내 불화와 갈등은 본질적으로 배타적인 경제 모델이 빚어낸 것이었다는 점을 떠올릴 만하다(Pearce 1998, 611).

15 유네스코는 2000-2009년을 ‘평화의 문화의 해’로 선언하고 과테말라에서도 ‘평화의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는 평화의 문화,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 상호문화주의의 (interculturalism), 갈등 해결, 평화협정, 인권과 법치 등 여러 주제들에 관한 소재자를 제작해 배포하는 사업이었다. 또 유네스코의 ‘평화의 문화 프로젝트’는 과테말라 교육부의 ‘국가 교육과정과 건전한 시민 양상’이라는 계획을 후원함으로써 과거에 정치적 양극화를 촉발한 상황, 반정부 운동에 대한 탄압, 평화 모색의 과정, 다문화주의, 마약과 알코올의 위험성 등을 가르칠 수 있도록 했다(Cole 2010, 346, 362).

장기 내전을 겪은 과테말라와 다른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에서 평화는 무엇보다 폭력 행위가 중지된 상태를 의미했지만 1996년 12월 과테말라의 평화협정이 공식 명칭대로 ‘확고하고 지속적인’ 현실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 동안 갈등을 초래하고 지속시킨 민감한 내부적 요인들의 규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과거사의 진실 규명과 평화의 정착을 위해 필수적인 구조적 변화는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앙아메리카 지역의 지속적인 탈군사회와 빈곤의 해소를 지향하는 공공 안전(치안) 전략 수립, 참여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과정과 제도의 강화, 누진과세와 균등한 토지 재분배를 통한 좀 더 공평한 자원 분배, 경제 성장뿐 아니라 종합적인 발전의 도모, 원주민 권리에 대한 효과적인 지지와 승인에 바탕을 둔 다문화적 환경의 확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Preti 2002, 116; Reilly 2009, 118).

적극적 평화의 험로를 실증하는 1996년 말 이래 과테말라의 사례는 평화 정착의 핵심적 조건들을 재확인하도록 이끈다. 과테말라의 평화협정 체결은 위대한 결단에서 비롯되었지만 평화 정착과 지속적인 민주화로 향하는 길에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탈군사회와 냉전적 사고방식의 탈피, 불평등의 감소를 위한 사회경제적 개혁 등 적잖은 과제가 놓여있다. 오랜 갈등과 충돌을 겪고 난 뒤 신뢰는 더디게 쌓일 수밖에 없지만 지역과 풀뿌리 대중 조직 차원의 활동과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Reilly 2009, 118, 120) 필요한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만이 결국 지속가능한 평화의 구축을 조금씩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Abrams, Irwin(ed.)(1999), *Nobel Lectures in Peace (1991-1995)*, Singapore and London: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 Bagley, Bruce Michael(1986), "Contadora: The Failure of Diplomacy,"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28, No. 3, pp. 1-32.
- Choi, Ho-Geun(2005), *Genocide*, Seoul: Chaeksesang.
- Cole, Elizabeth A.(ed.)(2010), *Teaching the Violent Past: History Education and Reconciliation*, Won-Joong Kim(trans.), Seoul: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Dictaan-Bang-oa, Eleanor and Jack G.L. Medrana(2004), "The Guatemala Peace Agreements of 1996: A Case Study," in Chandra K. Roy et al.(eds.), *Beyond the Silencing of the Guns*, Baguio City, Philippines: Tebtebba Foundation, pp. 106-126.
- Doyle, Kate and Carlos Osorio(1996), "U.S. Policy in Guatemala, 1966-1996," <https://nsarchive2.gwu.edu/NSAEBB/NSAEBB11/docs/>
- Frängsmyr, Tore and Irwin Abrams(eds.)(1997), *Nobel Lectures in Peace (1981-1990)*, Singapore and London: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 Gaddis, John Lewis(1998),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altung, Johan(1996),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Osl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Garrard, Virginia(2017), "Living with Ghosts: Death, Exhumation, and Reburial among the Maya in Guatemala," in Roberta Villalón(ed.), *Memory, Truth, and Justice in Contemporary Latin America*, Lanham and New York: Rowman and Littlefield, pp. 133-144.
- Godoy, Angela S.(2002), "Lynchings and the Democratization of Terror in Postwar Guatemala: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No. 3, pp. 640-661.
- Goldman, Francisco(1996), "In Guatemala, All is Forgotten," <https://www.nytimes.com/1996/12/23/opinion/in-guatemala-all-is-forgotten.html>
- _____(2007), *The Art of Political Murder: Who Killed the Bishop?*, New York: Grove Press.
- Granovsky-Larsen, Simon(2017), "The Guatemalan Campesino Movement and the Postconflict Neoliberal State,"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44, No. 5, pp. 53-73.
- Halliday, Fred(1983), *The Making of the Second Cold War*, London: Verso.
- Howard, Michael E.(2002), *The Invention of Peace*, Doo-Hwan Ahn(trans.), Seoul: Jeontonggwahyundai(Tradition and Contemporary Era).
- Isaacs, Anita(2010), "At War with the Past? The Politics of Truth Seeking in Guatemala,"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Vol. 4, No. 2, pp. 1-24.

- Janssen, Wilhelm(2010), *Reinhard Koselleck's History of Concept 5: Friede*, Sang-Hi Han(trans.), Seoul: Pureunyeoksa(Green History).
- Jonas, Susanne(2000a), *Of Centaurs and Doves: Guatemala's Peace Process*, Boulder and Oxford: Westview Press.
- (2000b), “Democratization Through Peace: The Difficult Case of Guatemala,” *Journal of Interamerican Studies and World Affairs*, Vol. 42, No. 4, pp. 9-38.
- Krznicaric, Roman(1999), “Civil and Uncivil Actors in the Guatemalan Peace Process,” *Bulletin of Latin American Research*, Vol. 18, No. 1, pp. 1-16.
- Kwon, Heon-Ik(2013a), *The Other Cold War*, Han-Joong Lee(trans.), Seoul: Minumsa.
- (2013b), “The Plurality of the Cold War,” *Yeoksabipyung(Critical Review of History)*, No. 105, pp. 221-235.
- Lederach, John Paul(1997),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US Institute of Peace Press.
- Lipschutz, Ronnie D.(1998), “Beyond the Neoliberal Peace: From Conflict Resolution to Social Reconciliation,” *Social Justice*, Vol. 25, No. 4, pp. 5-19.
- Mouly, Cécile(2008), “Peace Constituencies in Peacebuilding: The Mesas de Concertación in Guatemala,” in Michael Pugh, Neil Cooper, and Mandy Turner(eds.), *Whose Peace?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Political Economy of Peacebuilding*,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pp. 302-317.
- Naciones Unidas, Asamblea General Consejo de Seguridad(1995), Carta de fecha 5 de abril de 1995 dirigida al Presidente de la Asamblea General y al Presidente del Consejo de Seguridad por el Secretario General(10 de abril de 1995), Anexo: “Acuerdo sobre identidad y derechos de los pueblos indígenas,” pp. 2-19, https://peacemaker.un.org/sites/peacemaker.un.org/files/GT_950331_AgreementIdentityAndRightsOfIndigenousPeoples%28esp%29.pdf
- Naciones Unidas, Asamblea General Cuadragésimo período de sesiones(1986), Tema 21 de programa, “La situación en Centroamérica: Amenazas a la paz y la seguridad internacionales e iniciativas a paz,” [28 mayo, 1986], pp. 1-4.
- Noh, Yong-Seok(2012), “The Civil Society Movement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ransitional Justice of Guatemala,” *Estudios Hispánicos*, No. 63, pp. 391-418.
- Oficina de Servicios para Proyectos de las Naciones Unidas(UNOPS)(1999), *Guatemala, Memoria del Silencio, Conclusiones y Recomendaciones*, Guatemala: UNOPS.
- Pearce, Jenny(1998), “From Civil War to ‘Civil Society’: Has the End of the Cold War Brought Peace to Central America?,” *International Affairs*, Vol. 74, No. 3, pp. 587-615.

- Prensa Libre(1996), “Gobierno y URNG firman la paz en 1996,” <http://www.prensalibre.com/hemeroteca/gobierno-y-urng-firman-la-paz-en-1996>
- Preti, Alessandro(2002), “Guatemala: Violence in Peacetime - A Critical Analysis of the Armed Conflict and the Peace Process,” *Disasters*, Vol. 26, No. 2, pp. 99-119.
- Reilly, Charles A.(2009), *Peace-Building and Development in Guatemala and Northern Ireland*, London and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REMHI(Recovery of Historical Memory Project), The Official Report of the Human Rights Office, Archdiocese of Guatemala(ODHAG)(1999), *Guatemala, Never Again!*, Maryknoll: Orbis Books.
- Seligson, Mitchell A.(2005) “Democracy on Ice: The Multiple Challenges of Guatemala’s Peace Process,” in Frances Hagopian and Scott P. Mainwaring(eds.), *The Third Wave of Democracy in Latin America: Advances and Setback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02-231.
- Short, Nicola(2007),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Post-Conflict Reconstruction in Guatemala*,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Sieder, Rachel(2001), “War, Peace, and Memory Politics in Central America,” in Alexandra Barahana de Brito, Carmen González-Enríquez, and Paloma Aguilar(eds.), *The Politics of Memory: Transitional Justice in Democratizing Societies*,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61-189.
- (2003), “War, Peace, and the Politics of Memory in Guatemala,” in Nigel Biggar(ed.), *Burying the Past: Making Peace and Doing Justice after Civil Conflict*,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pp. 209-231.
- Steenkamp, Christina(2011), “In the Shadows of War and Peace: Making Sense of Violence after Peace Accords,” *Conflict, Security and Development*, Vol. 11, No. 3, pp. 357-383.
- United Nations, Peacemaker(1996), “Agreement on a Firm and Lasting Peace,” <https://peacemaker.un.org/guatemala-firmlastingpeace96>

Article Received: 2018. 10. 19.
Accepted: 2018. 11. 19.